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49
----------	------

발의연월일 : 2020. 7. 28.

발 의 자 : 소병철 · 이규민 · 서동용
신정훈 · 서영석 · 김정만
김홍걸 · 위성곤 · 이개호
김희재 · 허영 · 이형석
이원욱 · 소병훈 · 한준호
강병원 · 천준호 · 김승원
이병훈 · 홍정민 · 이수진
김진표 · 한정애 · 박광온
송옥주 · 정춘숙 · 최혜영
박정 · 이장섭 · 김한정
김민철 · 주철현 · 정일영
홍기원 · 박홍근 · 민형배
윤미향 · 문정복 · 윤준병
양이원영 · 오영훈 · 이해식
임오경 · 유동수 · 안규백
인재근 · 윤영덕 · 박완주
변재일 · 신동근 · 이용선
김용민 · 서삼석 · 송갑석
홍성국 · 김종민 · 이상민
이용빈 · 정필모 · 윤재갑
김철민 · 오영환 · 양정숙

홍영표 · 장경태 · 장철민
기동민 · 전용기 · 이상현
도종환 · 김영진 · 조승래
정성호 · 이광재 · 박주민
신영대 · 김성환 · 양경숙
노웅래 · 설 훈 · 고영인
권칠승 · 정태호 · 박용진
박영순 · 정청래 · 우상호
이탄희 · 권인숙 · 이낙연
김승남 · 이인영 · 김교홍
강훈식 · 남인순 · 진성준
한병도 · 홍익표 · 김원이
안민석 · 김두관 · 민병덕
전혜숙 · 박범계 · 송재호
김윤덕 · 송영길 · 진선미
서영교 · 윤호중 · 박성준
황운하 · 양기대 · 김병욱
조오섭 · 윤영찬 · 최기상
맹성규 · 고용진 · 최종윤
박재호 · 김병기 · 민홍철
최인호 · 김영주 · 김남국
이용우 · 이상직 · 김민석
양향자 · 강선우 · 김수홍
백혜련 · 김성주 · 전재수
임호선 · 이성만 · 임종성
강준현 · 박상혁 · 김영배
이학영 · 유기홍 · 김민기

전해철 · 고민정 · 김태년
윤후덕 · 허종식 · 윤관석
우원식 · 이수진^(비) 의원
(152인)

제안이유

여수·순천 10·19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임. 이로 인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었음.

여수·순천 10·19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되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하고 종합보고서를 통해 희생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한 바 있음.

하지만 당시 한정된 조사 기간과 관련 자료의 멸실 등으로 피해 신고접수와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어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가 신고접수와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 필요한 상황임. 더구나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게 요구됨.

또한 2020년 1월 20일 여순사건희생자재심재판에서 재판부는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하면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

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한다고 최종판결문에 적시한 바 있음.

이에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합당한 권리행사와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안 제4조).

라.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진상조사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

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위원회는 진상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8조).

바. 누구든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안 제9조).

사.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진상 규명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국가는 희생자 또는 유족 중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 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와 간호 및 보조 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위원회의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19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합당한 권리 행사와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순천 10·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

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 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사항
7.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8.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9. 희생자 및 유족의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진상규명 신청) ① 희생자, 그 유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및 그 밖에 신고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청

취

3.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된 사람 및 관계 행정기관, 단체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사람,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실에 관하여 중요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1. 대상자의 성명·주거. 다만,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3. 동행할 장소

4. 동행명령장 발부연월일

5. 동행명령장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과한다는 취지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사무처 직원이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사무처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는 소속 부대장은 사무처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8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

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8조제2항에 따라 진상조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또는 진상규명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피해 및 진상규명 신고처 설치 및 공고)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호적부 소

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령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여수·순천 10·19사건 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평화 등 인권교육
6. 그 밖의 위령관련 사업

제14조(재단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2. 추가 진상규명조사의 지원
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학술 활동의 지원

4. 위령공원 조성 및 관리

5.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 지원 사업 등

6. 그 밖에 관련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운영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탁금품의 접수) ① 제14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① 희생자 또는 그 유족

으로서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지원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신청은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지원금등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재심의 등)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제18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때 재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① 타인의 명예를 해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규명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여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